인권정보자료실
SAg1.21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상임활동가 범용 (likebird@jinbo.net)
2005년 6월

본 의견서는 인권운동사랑방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 본 활동가 개인의 의견임을 먼저 밝혀 둔다. 본 활동가는 그간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활동과 인권정보자료실 활동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홈페이지가 국민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보장에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2기 인권위가 어느 정도 자신의 업무 형태를 갖추게 된 현재, 국민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인권위의 홈페이지가 어떤 식으로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 상황들

#1. 인권위 결정문은 어디 있지?

인권위에는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1소위원회, 2소위원회, 3소위원회 등 다양한 결정단위들이 있다. 여기서 내린 결정들을 보고 싶으면 인권위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 회의일정·결정문] 메뉴를 보면 된다. 그런데 그곳을 클릭하는 순간 '어! 내가 원하는 결정문은 여기 없잖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다행히 원하는 결정문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이내 '여기 모든 결정문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결정문이 여기 없을 지도 몰라. 그러면 어디서 찾을 수 있지. 그땐 또 이곳저곳에 전화를 해서 결정문을 보내 달라고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 [▷국가

인권위원회 ▸ 회의일정·결정문]에는 모든 결정문들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회의일정조차 공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극단적인 예로, 홈페이지만을 놓고 본다면, 제2소위원회는 작년 6월 이후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2. 회의안건들도 아주 훌륭한 인권자료들인데……

전원위원회 방청을 해 보면 매번 아주 두꺼운 회의안건지들을 받아보게 된다. 각 안건들은 대부분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근거들을 풍부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비록 (아직 인권위에서 확정된 내용이 아닌) 회의중인 자료라 할지라도, 인권적인 논의를 풍부화하는 데 아주 훌륭한 자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매번 회의마다 5~6건 정도의 안건이 올라오니 인권위 회의안건지는 어쩌면 풍부한 자료의 보고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안건지를 받아보려면 직접 회의방청을 해야 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비공개가 아닌 이상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회의안건이 홈페이지에 자동적으로 공개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위가 진행하는 고민에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3. 지난 3년간 인권실태조사 자료가 77건이나 된다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인기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조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업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100%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뭄 속의 가랑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인권위는 2002년에 29건, 2003년에 23건, 2004년에 25건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올해 3월 인권위가 그간의 실태조사 사업목록을 스스로 공개함으로써 알려지게 됐다. 인권위 홈페이지 [▷인권정책 ▸ 인권상황실태조사] 메뉴에는 2005년 6월 14일 현재 2002년도에 25건, 2003년에 22건, 2004년에 2건만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다. 그나마 16건은 2005년 5월 25일 이후에 등록되었다. 인권위가 진행하는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업이 무엇인지만이라도 알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4. 청문회와 토론회는 다르다?

인권위 홈페이지 [▷인권정책 ▸ 청문회·토론회] 메뉴는 '▸청문회·공청회·간담회'와 '▸토론회'로 나뉘어져 있다. '음, 청문회와 토론회는 다르구나!' 그러나 실제 상황을 보면 청문회 자료든, 공청회 자료든, 간담회 자료든, 토론회 자료든, 모두 [▷인권정책 ▸ 청문회·토론회 ▸ 청문회·공청회·간담회] 메뉴에 등록되어 있으며, [▷인권정책 ▸ 청문회·토론회 ▸ 토론회] 메뉴에는 아무 자료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 '아니, 홈페이지 메뉴상으로는 구분해 놓고 실제 자료등록은 구분없이 하는 건 뭔가?' 또한 의심스러운 것은 홈페이지 상으로는 지금까지 인권위가 개최한 청문회·공청회·간담회·토론회가 모두 28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인권위가 개최한 청문회·공청회·간담회·토론회 자료가 모두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다면, 인권적 논의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텐데. 아쉬움은 끝이 없다.

#5. 차별과 관련된 결정문을 모두 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인권위가 내린 결정들 중 차별과 관련된 것을 모두 보고 싶었다. 먼저 인권위 홈페이지 중 [▷국가인권위원회 ▸ 회의일정·결정문] 메뉴를 들어가 봤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든 결정문이 수록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인권위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인권정보 ▸ 차별관련자료] 메뉴를 클릭했다. 하지만 이곳은 차별 관련 결정문을 등록하는 곳이 아닌가 보다. 이번에는 [▷인권정책 ▸ 법령·정책개선권고] 메뉴를 클릭해 봤다. 그런데 차별과 관련된 법령·정책개선 권고는 없는 것인지, 역시나 차별 관련 결정문들은 없었다. 도대체 어느 곳에서 차별과 관련된 결정문들을 모두 볼 수 있는 거지?

#6. [▷인권정보 ▸ 정책자료]와 [▷인권정책 ▸ 주요정책자료] 메뉴의 차이점은?

인권위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너무 헷갈렸다. [▷인권정보 ▸ 정책자료]와 [▷인권정책 ▸ 주요정책자료] 메뉴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다. [▷인권정보 ▸ 정책자료] 메뉴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내서 △NEIS 쟁점과 대안 △인권위 업무설명회 △인권논문집 등이 등록되어 있

고, [▷인권정책 ▸ 주요정책자료] 메뉴에는 △국가인권기본계획 안내서 △인권위 업무설명회 △인권위 주요업무계획 등이 등록되어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차이람? 한편, [▷인권정보 ▸ 인권통계자료] 메뉴에는 다달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이 들어있다. 그런데 정작 [▷진정·민원 ▸ 진정·민원 상담실 ▸ 진정상담통계] 메뉴에는 아무런 내용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메뉴 구성이 복잡해서야 인권위 자료가 아무리 훌륭한들 제대로 활용이 될 리가 없겠다.

#7. 살려 주세요~~~ 홈페이지가 죽어간다

인권위 홈페이지의 많은 메뉴들이 죽어가고 있다. 새로운 내용이 꾸준히 갱신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율이 저조하여 소통과 참여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서 꾸준히 내용을 등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별도의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그저 관련 메뉴만을 개설해 놓은 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나머지는 국민들의 몫이다'라고 자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또한 애초부터 관리가 불가능한 메뉴는 아예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아우름터 ▸ 인권단체일정표] 메뉴를 보라.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일정을 등록할 인권단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인권위가 무수한 인권단체의 일정들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홍보할 계획이 없는 이상 [▷아우름터 ▸ 인권단체일정표] 메뉴는 없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

#8. NAP 추진기획단 이외의 특별단위는?

인권위는 특별히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인권위의 일상적인 체계와 별도로 독립된 단위를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다. 현재로서는 NAP 추진기획단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 홈페이지에도 NAP와 관련된 별도의 메뉴 [▷인권정책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두고 있다. 물론 [▷인권정책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메뉴도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러나 NAP와 관련해서는 그나마 홈페이지 메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지금까지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위원회,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비정규직

등 각종 TF팀 등 특정 주제에 대한 특별단위를 구성해 왔다. 하지만 이들 특별단위는 홈페이지 메뉴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채, 떠들썩하게 탄생했다가 슬그머니 사라지곤 했다. 인권위가 특별단위를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선정한 특정 주제는 우리사회에서 민감한 인권문제들이며,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특별단위의 활동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내고, 의견수렴과 토론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메뉴 구성이 필요하겠다.

□ 문제의식

- 앞의 상황들은 지금까지 인권위 대응 활동 속에서 인권위의 홈페이지와 관련해 들었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되살려 본 것이다. **국가기관의 홈페이지는 해당 국가기관의 활동과 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온라인으로 알리고 기록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소통과 참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 여기에 덧붙여 인권위 홈페이지는 여타 다른 국가기관의 경우보다 국민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보장에 더욱 철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권위는 국내 유일의 인권옹호 전담기구로서 국가기관이 갖는 공신력과 정보수집 능력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활동을 벌이고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바, 인권위의 활동과 자료는 그 자체로 인권신장에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인권위는 출범 전부터 급속히 고착된 관료주의와 폐쇄주의로 말미암아, 인권위 활동과 생산자료의 접근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 이후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은 홈페이지 구성의 복잡성과 불성실성 등으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홈페이지로서도 명함을 내밀기에 부끄러운 실정이다.

- 돌이켜 보건데 지금까지 인권위는 인권의 신장을 위해 자신의 활동과 자료들이 어떻게 제공돼야 하는지, 그것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어떻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에 따

라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별다른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인권단체 활동가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인권위 홈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인권위의 활동과 자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 및 알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인권위 홈페이지: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인권위 홈페이지의 문제점은 앞의 상황들을 잘 분석해 보면 모두 도출될 수 있다. **인권위 홈페이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정보제공의 불성실성에 있다고 하겠다.** 관련 활동이나 자료들이 누락되지 않고 빠짐없이 등록되는 것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특히 그것이 특정자료를 찾는 경우가 아니라 특정영역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참고하고 싶을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인권위 홈페이지는 자신의 활동과 생산자료의 인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성실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불성실함의 단적인 예는 웹진 <월간 인권>이다. 웹진 <월간 인권>은 2004년 12월호 이후 전혀 갱신되지 않고 있다.

-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인권위가 깊은 반성을 하고 관련 활동과 생산자료를 꾸준히 등록한다면 인권위 홈페이지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물론 지금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자료는 아무리 많아도 활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데 **현재 인권위 홈페이지의 메뉴는 이용자가 이용하기에는 너무도 불친절하게 짜여져 있다.** 비슷한 메뉴들이 중복되기도 하고, 메뉴 구성이 필요이상으로 세세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메뉴 구성으로는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찾다가 지쳐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 그렇다면 인권위의 홈페이지는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는 단지 홈페이지 개편 방식으로 협소하게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위 활동과 생산자료에 대한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충실하도록 인권위 홈페이지는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지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해당 자료를 공개한다는 소극적인 마인드를 넘어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공개한다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요구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보제공의 성실성이라는 원칙이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

- 또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을 때에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정보공개 방식과 체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일상적인 정보공개 방식과 체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인권위 홈페이지의 메뉴 구조는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상적인 정보공개 방식과 체계는 정보생산자의 입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인권위 활동과 생산자료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필요를 체계화하는 것일 게다.

- 인권위는 인권옹호와 신장을 자신의 존립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인권위의 업무는 모두 인권옹호와 신장 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한 **인권위의 일상적인 활동은 될 수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알려질 필요가 있고, 이것들이 하나의 메뉴를 구성한다면 정보이용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인권위의 일상적인 인권옹호 활동 및 생산자료로는 △인권위 결정문 △인권위 회의안건지 △청문회·공청회·간담회·토론회 관련 자료 △인권상황실태조사자료 △기타 인권위 발간자료 등일 것이다.

- 일상적인 인권옹호 업무 및 생산자료 이외에 특정주제에 특별단위를 꾸려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별단위들은 별도의 홈페이지 메뉴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NAP 추진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위원회 △각종 TF팀 등이 그것이다. 특정 중요사안에 대한 인권적 의사소통은 단지 몇 차례 간담회를 하고 일정기간 의견수렴 기간을 두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으며,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공개적인 여론 형성이 중요한만큼 인권위는 특별단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홈페이지 메뉴 기획을 할 필요가 있겠다.

- 또한 국민들에게 인권위를 일반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한 일인 바, **인권위의 위상, 기능, 업무 등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글들은, 앞서 이야기한 인권위 활동과 별도의 메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홈

페이지를 통해 인권위에 보다 쉽게 진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현 홈페이지로도 크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주장을 하지는 않겠다. 다만 정보공개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간략한 제안을 할 것이다.

□ 인권위 홈페이지: 하나의 대안

-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문제제기를 인정한다는 것과 그 문제를 고치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것 같다. 그 문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상상력이 부족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인권위 홈페이지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명확히 할 것은 이것은 하나의 대안이지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아래 제시하는 하나의 대안을 참고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메뉴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 먼저 인권위에서 생산하는 자료와 활동들을 이용자, 즉 국민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게 짜임새있게 정렬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구분이 모호한 [▷인권정보] 메뉴와 [▷인권정책] 메뉴를 하나의 메뉴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위메뉴는 '▹위원회결정문', '▹청문회·토론회', '▹인권조사연구(연구용역자료)', '▹인권교육', '▹국제인권', '▹정기간행물', '▹기타발간자료' 등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 이렇게 통합하는 이유는 애매하게 메뉴를 많이 만드는 것이 홈페이지 활용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며, 굳이 현재와 같이 메뉴를 두 개로 나눌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하위메뉴를 자유권·사회권·소수자차별 등 인권범주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인권위 활동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인권정보] 메뉴는 인권범주별로 구분하고 있음). 인권범주에 따른 구분은 인권자료실의 자료분류 체계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음 **[▷국가인권위원회] 메뉴를 '▷위원회활동'과 '▷위원회소개' 메뉴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활동' 메뉴에는 동적인 활동 내용을 넣는데,

여기에는 '▹공지사항', '▹보도자료', '▹위원회 회의일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TFT 등 각종 특별단위' 등이 있을 것임. '▷위원회소개' 메뉴에는 정적인 홍보 내용을 넣는데, 여기에는 '▹설립목적·기능·구성', '▹연혁', '▹비전과 정책·사업계획·예산', '▹자주하는 질문', '▹찾아오시는길 및 직원찾기', '▹홍보자료', '▹위원회CI' 등이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메뉴 개편의 핵심은 현 메뉴의 층위 구조를 단순화**하는 데 있다. 현재의 메뉴는 층위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인권위의 동적인 활동 내용과 정적인 홍보내용이 한데 뒤섞여 결과적으로 원활한 정보접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특히 **제안하고 있는 대안에서 '▷위원회활동▹위원회 회의일정' 메뉴에는 사전 안건목록뿐만 아니라 안건지 자체가 공개되어야 하며, 사후에는 요지 회의록도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TF팀 등 각종 특별단위의 활동은 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처럼 별도의 메뉴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다만 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메뉴의 기능은 거의 정지해 있는데,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독자적으로 메뉴를 개설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소통과 참여를 위한 별도의 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덧붙여 현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소식] 메뉴가 [▹공지사항], [▹보도자료], [▹관련기사], [▹위원회활동]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위원회 활동에 대한 홍보는 [▹공지사항]이나 [▹보도자료] 메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원회활동] 메뉴의 폐지를 제안한다.

○ 현재의 [▷진정·민원]과 [▷아우름터] 메뉴는 약간의 개선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앞서 상황들 중에서 문제가 됐듯이, [▷진정·민원▹진정·민원 상담실▹진정상담통계] 메뉴와 [▷인권정보▹인권통계자료] 메뉴의 중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아우름터▹인권단체일정표] 메뉴의 폐지를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아우름터▹인권모임] 메뉴 등은 국민소통과 참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 다만 인권위 홈페이지의 **[▷진정·민원▹정보공개청구] 메뉴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성부 홈페이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말만 부연하고 싶다. 여성부 홈페이지는 최상위 메뉴로 [▷정보공개방]을 두고, 이에 따른 하위메뉴에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자료], [▹비공개대상정보], [▹사전공표대상목록], [▹주요문서목록], [▹정보공개청구]를 만들어 다른 국가기관

에 비해 정보공개 서비스에서 앞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단지 국민이 어떤 정보를 원하면 공개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는 아닐 것이다.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이전에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스스로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공개할 때만이 국민의 알권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겠다. 특히 인권위의 활동과 자료는 그것 자체로 국민의 인권신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권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단지 알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다른 모든 인권보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은 인권위의 광범한 활동과 자료를 짜임새있게 정리할 수 있는 부수적인 업무 효과도 낳게 된다고 생각한다.

- 인권위 홈페이지의 문제는 단지 메뉴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다. 누차 지적했듯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국민소통과 참여에 대한 별도의 기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홈페이지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운영의 대표적인 결과였던 현 홈페이지를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2기 인권위의 발전적인 활동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 한편,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로 인해 본 의견서에서는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는 장애인 단체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공동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이상의 문제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지 않고 인권위 홈페이지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끝>